

오피니언

월/요/광/장

정준모



이젠 사오정 같은 소리지만 '바다이야기'가 훗날 체인업인 줄 알았다는 농담 아닌 농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관하고 방만한 정치인과 공무원들, 자기 주머니 차는 재미에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한 장사치들에게는 치도곤을 안겨야 하겠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소는 잃었더라도 이 기회에 튼튼한 외양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돌이켜 보면 '바다이야기'는 구성상 결말이 뻔한 삼류소설에 다름 아니었다. 게이트나 사건이 그렇듯이 등장인물들이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다. 특히 악역을 자처하는 정치인들과 조직 폭력배들이 조연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근원은 국민의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다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의 성공 배경에는 국민의 정부가 주장했던 '문화산업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맞고 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상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을 말할 때부터이다.

문화에 대한 기초가 부실해서 문화산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문화예술의 기초체

벼물중 으뜸은 실적이라는 벼물

력을 기르고 향수 층을 확대한 뒤에 문화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는 비개혁적이라는 말 한마디에 밀려나고 말았다. 대통령님의 입에서 스피커의 영화가 어땀고, '태극기 휘날리며'의 성공이 자동차 수출 및 대와 맞먹으며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러 재보고 저리 살펴봐도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하기 전에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을 것은 자명할 일. 처음 '국민의 정부'에서는 영화가 그러대로 실적을 유지해 주었지만 '참여

정부'들어서는 '혁신적인 실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냥 실적도 벅거운 터에 혁신적인 실적을 올리려니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문화부의 문화산업국은 산업을 문화로 포장해서 실적을 올리기에 바빴다.

가시적인 실적은 영화를 다루는 영상산업과에서 나올 것은 뻔한 일. 그런데 전자도박산업자들이 문화부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에게 실적이라는 벼물은 최적이, 최상의 벼물이 된다는 것을 간파한 이들이 문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토의 전자게임장화를 파시하고, 문화산업

무원들은 '반 혁신적'이란 이유로 입을 다물어야 했다. 사실 규제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불필요한 것이 있을 터인데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비 혁신적'이라는 평가 때문에 도둑이 들어도 잡지 않는 개들이 가득해지고 만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가끔 짓는 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권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섬기는 충정어린 개들의 짓는 소리는 그 연유도 알아보고 않고 바로 시끄럽다가, 몰졸 모르는 개라는 가장 치욕스런 이유를 들어 보신탕집으로 보내지고 말았다. 도둑이 들러니 개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짓을 업두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개가 짓지 않으니 밤은 안전하다는 혁신적인 발상의 결과이다.

이번 정부 들어 문화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혁신'을 위해 혁신인사 담당관, 혁신 토론방, 팀제 등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므로써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혁신하기를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말로만의 혁신과 혁신 실적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오류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공직에서 정책을 주무르는 한 실적이라는 벼물은 언제나 통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미술평론가>

이런 정부 들어 문화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혁신'을 위해 혁신인사 담당관, 혁신 토론방, 팀제 등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므로써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혁신하기를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말로만의 혁신과 혁신 실적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오류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공직에서 정책을 주무르는 한 실적이라는 벼물은 언제나 통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미술평론가>

이런 정부 들어 문화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혁신'을 위해 혁신인사 담당관, 혁신 토론방, 팀제 등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므로써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혁신하기를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말로만의 혁신과 혁신 실적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오류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공직에서 정책을 주무르는 한 실적이라는 벼물은 언제나 통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미술평론가>

이런 정부 들어 문화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혁신'을 위해 혁신인사 담당관, 혁신 토론방, 팀제 등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므로써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혁신하기를 마다하겠는가.

이런 정부 들어 문화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혁신'을 위해 혁신인사 담당관, 혁신 토론방, 팀제 등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므로써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혁신하기를 마다하겠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업도시 표류...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영암·해남 관공래저형 기업도시와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남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도시의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목적은 낙후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한 판 크게 벌이겠다'고 했던 영암·해남 기업도시(J프로젝트)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간척지 양도·양수와 내국인 카지노 개설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와외의 간척지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J프로젝트의 핵심인 카지노를 포함한 F1특별법 제정은 표류하고 있다.

무안기업도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출자를 약속했던 중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데다가 국내 기업들도 참여를 기피해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백지화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초 개발계획의 축소와 단계적 개발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불투명하거나 전제조건이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목적은 낙후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불투명하거나 전제조건이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목적은 낙후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미 FTA 협상 결코 서둘러선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6일부터 4일간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본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1·2차 본협상 때와는 달리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개방하고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제외할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미국의 협상안은 강경하다.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부문의 경우 미국은 늦어도 10년내에 자국의 모든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농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쌀과 쇠고기, 과실류 등 농업 전반이 고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섬유 등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섬유류의 경우 한국은 5년내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취약부문을 이유로 10년내 철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이 협상안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3차 본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협상상은 매우 중요하다. 1·2차 본협상 때와는 달리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개방하고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제외할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물론 섬유 등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섬유류의 경우 한국은 5년내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취약부문을 이유로 10년내 철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이 협상안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3차 본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無等鼓

동서 냉전이 격화되던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다. 일격을 당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소련과의 사이에 우주 레이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냉소했다.

드디어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다. 그리고 5일 뒤인 21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윈이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달에 찍는다. 암스트롱은 "이 한걸음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일 뿐이나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상한 자존심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스푸트니크 발사 1년 뒤인 1958년 미 항공우주국(NASA)을 발족, 우주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가가린 이후 45년 동안 소련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쿠바 베트남 몽골 등 34개국에서 500명의 우주인이 배출됐다.

최초의 우주인



그러나 소련은 1961년 4월 12일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면서 우위를 지켜갔다. 1시간 29분동안 지구 상공을 일주한 첫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지구는 푸른 빛이다"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소감을 남겼다.

우리나라도 2008년을 목표로 최초의 우주인 선발에 들어갔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만여명이 지난 2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체력 테스트를 받았다.

가가린의 우주 비행이 있던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은 "긴급한 국가적 필요"(Urgent national needs)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60년대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급년 말까지 4단계 심사를 거쳐 우주인 후보 2명이 선발된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받던 뒤 최종적으로 한명이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는 행운을 쥐게 된다.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주인도 이제 꿈만은 아니다.

▲이미숙·광주시 북구 운임동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성주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중국 정법대학에서 방문학자로 국제화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1년 만에 돌아온 법원. 비록 겉모습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속 모습은 참 많이 변해 있었고, 현재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보통 2주일에 한 번의 변론 기일, 일주일에 한 번씩의 준비절차 기일, 조정기일을 갖는 식으로 재판한다. 한 번의 법정 변론기일에서 수십 건의 사건을 함께 재판하고 있다. 중국은 합의부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 먼저 당사자들에게 기피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 기피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기회를 준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민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민원인의 수요에 맞춰 개조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원·피고, 검사, 피고인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것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법정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법정에서의 재판

중국 재판 방식도 배워야

공정한 재판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자신의 주장과 반론 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은 대개 하루에 모두 끝마친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물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마련된 탁자에 모두 놓여져 있고, 당사자들 사이의 공방이 서로 오간 후 재판장은 심리를 마치고 양쪽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그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제공한 뒤 재판을 마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천년 이상의 찬란한 문화유산, 광대한 영토와 아름다운 자연유산 이외에 필자가 중국 북경에서 1년간 있으면서 본 중국의 재판은 현재 우리 법원이 미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한 발 더 다가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의 재판과 관련, 중국 법원의 재판제도는 어떠한 지 일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 법률문화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한참 뒤져있다. 다만, 중국 법원의 법정 재판 진행 방식만큼은 현재 우리 법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한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처럼 재판 방식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 정도로 깊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광주지법 판사>

방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강력 행정단속 펼쳐야

도시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계식 주차장이다.

지 않는 것이다. 철골 구조물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형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적정대수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으로 법정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의 건축주들이 규정을 맞추는 있도록 도입한 방법이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다. 좁은 부지를 활용해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셈이다.

노후와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설치한 뒤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철거비용이 만만치않다 보니 건물주들이 철거를 꺼리는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활용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흉물로 방치된 시설은 철거를 하도록 강력한 행정단속을 펼쳐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데 있다. 건물 사용검사를 받을 때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곧바로 이를 폐쇄해버리는 것이다. 인건비·전기비 등을 아끼기 위해 사용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승업·광주시 북구 중흥동

기고 이오승

최근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의 노인의 삶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65세 노년인구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이 도시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면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농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노인들에게 효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농협의 지역문화복지센터 등을 연결한 종합복지체제 구축은 물론 노인 연금 확대 및 의료보장정책 등도 확대시켜야 한다.

'2005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고령화 지수 8.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고령화 지수 14.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곡성, 구례 등 19개 군의 절반이 이미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이고

하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세계은행 개편 등 출산장려 정책은 접할 수 있지만 농촌노인 복지대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20년 후의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것보다 현재의 초고령사회인 농촌노인의 복지대책과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농촌 고령화 복지대책 시급하다

대부분의 타 군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농촌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으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로 농촌노인의 대다수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농촌 노인들은 누적된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고령에 의한 치매나 중풍 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환경시설 미비로 각종 혜택에서 소외돼왔다.

위에 처한 농촌과 농민을 진정 내이웃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산을 수립하고, 무엇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과연 정부 정책에 대해 농민이 신뢰할지를 농민의 입장에서 촘촘히 파악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한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공보보림팀 차장>

'사고 위험' 아파트 놀이터...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

아파트 옆 놀이터를 자주 찾는데, 부서져 방치된 놀이터 시설물들 때문에 위험하다. 쇠로 된 기둥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난 채 방치된 경우 자칫 사고 위험도 높다.

어두워 이용할 수 없다. 상당수 놀이터가 비슷한 형편이다. 인근 주민들이 데리고 나온 개들의 배설물이 그대로 놓여 있는 곳도 있다.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기둥도 많아 그네의 경우 양쪽 높이가 맞지 않아 기우뚱하고, 조임새가 헐겁다.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어 해가 진 뒤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놀이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이미숙·광주시 북구 운임동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亨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